



[판례] 대법원, 통신사의 선불폰 부활충전을 정보통신망법상 금지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으로 판결

황의관¹⁾

1 주요내용

- 대법원은 번호유지기간 내에 있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하는 ‘부활충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결(대법원 2018.7.12. 선고 2016두55117) 하였음
-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 S통신사는 2010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선불폰 위탁대리점 4곳과 공모해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이용하여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회사 비용으로 약 87만 차례 임의로 요금을 충전(이른 바 ‘부활충전’)해 가입상태를 유지하여, 방통위는 이러한 부활충전이 당초 이용자에게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S통신사는 방통위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 선불폰 서비스는 이용자의 충전금액에 따라 서비스 사용기간이 변동되고 이용자가 더 이상 충전하지 않으면 90일 후 이용기간이 종료되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인데, 통신사가 요금을 충전하였기 때문에 이용자 모르게 계약이 유지되었음
- S통신사는 이에 대하여 “요금 충전의 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서, 넓게 보아 서비스의 범주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므로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의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부활충전은 선불폰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부활충전이 선불폰 이용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새로운 청약 행위 또는 광고 등 마케팅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동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의 받은 목적 외의 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
- 방통위 측은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의 범위는 정보주체의 동의의사가 표시된 범위인 동의서 문언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취지를 생각할 때 정보주체의 의사가 핵심이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의사는 이용기간 종료 후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충전을 위해 개인정보가 이용되기라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은 방통위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가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 받은 목적인 ‘서비스 제공’은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자 동의하에 공급하는 것이지, 원고가 해당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하며, 방통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은 “선불폰 서비스 제공자인 원고가 고객인 이용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충전하여 주는 것도 이용자들의 의사에 합치할 때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선불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용자에게 원고가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한 것은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들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서비스라고 보기

1)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humanright77@kca.go.kr)

어려운 점,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정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계약이 해지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이용자의 경우에는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선불폰 가입번호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됨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염려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상고를 기각했음

2 시사점

- 대법원의 본 판결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무분별한 이용을 위법으로 선언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임
 - 실제 부활충전은 통신사들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개인정보 수집목적과는 관련이 없음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 개인정보의 이용도 수집목적과의 관련성이 있는 한도에서 필요최소한으로 이용해야 함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방식은 이러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번 판결을 통해 통신서비스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이용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함

자료인용 시 출처를 밝혀주시요.

[원문정보]

법원도서관 대법원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6두55117
https://library.scourt.go.kr/kor/judgment/w12_08r.jsp